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민 경 훈*

2009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1차 년도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는 교육과정을 급히 또 다시 바꾸려 한다. 정부는 그 이유로서 교육의 고질적 병폐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비롯되어 또 다시 개정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정의 핵심 내용으로서 20%선에서 과목의 자율적 증감 허용, 특별 활동의 증가, 특정 교과와 집중이수제 일괄 적용, 초등 수업 시간의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당성이 결여된 교육과정을 급히 확정·고시할 때,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미래의 한국 사회가 될 것이다. 하나의 교육과정이 대동하기까지에는 다양한 여론 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많은 교과 전문가들의 참여, 절차적 타당성, 그리고 충분한 연구의 기간 등이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과 믿을만한 신뢰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 주제어 : 음악교육, 음악교과, 미래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차 례

- I. 들어가면서
- II.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연구 진행 과정
- III. 제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논의
 - 1. 교육과정 개정 시기의 적절성 문제
 - 2. 불분명하게 제시된 인간상 '글로벌 창의 인재'
 - 3. 입시 교육의 강화
 - 4. 피상적인 '핵심 역량' 교육과정
 - 5.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문제점
 - 6. 집중이수제의 문제점
- IV. 음악교육 관점에서의 문제점 논의
- V. 학교의 독립 교과로서 음악 교과의 당위성
- VI. 나가면서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I. 들어가면서

교과부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금년에 또 다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고 발표하였다. 2009년 10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1차 총론 시안을 공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은 그간 몇 달 동안에 걸쳐 논란이 되었던 ‘미래형 교육과정’의 새로운 명칭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년군 및 교과군 도입, 1학년부터 6교시 수업 실시,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의 집중이수제를 통한 학년별 배율 과목 축소, 창의적 재량 활동 도입, 중학교까지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적용, 고등학교에서의 국·영·수 교과목 강화, 20%선에서 과목의 자율적 증감 허용 등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교육 개혁을 통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009년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시행되는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급하게 서둘러 새로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금년 말에 고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3년(2004~2006년)에 걸쳐 현장 교사, 시도 교육청 관계자, 대학 교수 및 연구 기관과 학회, 교원 단체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모아 개발한 것이며, 시행에 앞서 2년간의 기초 연구, 여러 차례의 공청회 교켈리고 토론회를 거쳐 고시하작 교켈 후 3년 뒤부터 교육과정이 시행이 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 및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교육의 목적 교목표가 새롭지도 특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하다는 이유 하나로만으로 2011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더구나 개정 교육과정을 우선 고시부터하고 켈 다음 세부 내용을 연구하겠다는 발상장 교6개월도 못되는 준비 기간, 여론몰이 설문 조사 등 비정상적인 과정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국면에서 과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교육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연구 진행 과정

정부는 2009년 말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2011년 초등학교부터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시행·확대하려고 한다. <표 1>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및 진행 상황이다.

<표 1> 2009년 교육과정 추진 및 진행 상황

날짜	내용
2009. 1. 9.	대통령직속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출범.
2009. 5. 4.	특위,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안 발표(연구기간 4개월).
2009. 6. 22~23	2009 개정 교육과정 특위, 리서치 & 리서치에 설문조사 의뢰, 실시(표집 1,000명).
2009. 7. 24.	2009 개정 교육과정 구상(안) 토론회 개최(연구기간 6개월), 특위 해체.
2009. 7. 30.	대통령직속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폐쇄.
2009. 9. 5.	한국교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전면 재검토 발표.
2009. 9. 8.	교과부 안병만 장관, 한국교총의 2009 개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요청 수용 발표.
2009. 9. 9.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협력체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및 해결 발표.
2009. 9. 10.	교과부 이주호 차관, 2009 개정 교육과정 원안대로 12월까지 시안 확정 발표. 교과부 내 <2009 개정교육과정추진단> 산하 2009 개정 교육과정 자문위원회(위원장 성태제)와 2009 개정교육과정 연구위원회(위원장 김성열) 운영 발표.
2009. 9. 14.~	교과부 이주호 차관, 각 시도 교육청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 확정 강행 홍보 강연 행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3년이나 걸려 만든 2007 개정 교육과정이 21세기 글로벌 창의적 인재를 만들기 위하여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서 구상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수업 부담 감축, 20%선에서 과

목의 자율적 증감 허용, 특별 활동의 30% 증가 그리고 특정교과의 집중 이수제 일괄 적용, 초등 수업 시간의 6교시 확대 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교과군을 형성하여 윤리, 도덕, 음악, 미술, 기술, 실과, 가정 등 군소 교과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핵심 내용은 <표 2>와 같다(교육과정특별위원회, 2009a, p. 1).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1) 국민공통 9년으로 조정 2) 국민공통 10개 교과 → 7개 교과군으로 조정 - 학년군별·교과군별 수업시수를 제시, 학년·학기 집중이수 가능 ※ 초등은 학기당 7개, 중학교는 8개 과목 이하로 편성 3)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교과군별로 초·중 20% 자율 편성

2009 개정 교육과정 구상안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 대토론회 제1회(서울, 2월 27일), 제2회(부산, 3월 27일), 제3회(광주, 4월 24일)에 걸친 의견 수렴 및 2009년 6월 23일과 24일 양 일 간에 교사 500명과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인터뷰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그리고 정부는 곧바로 연구가 시작된 지 겨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이 학습 효과가 낮고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며(학부모 66.2%, 교원 75.4%), 교과 지식 위주 및 성적 위주의 학습 관행을 심화(학부모 59.0%, 교원 70.6%)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 76.2%와 교원 72.8%가 “지금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주장하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정당화시켰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구상을 위해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위촉된 위원들은 각계 현장 전문가들로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균형 있는 인물 22명(교육이론·과학기술·인문사회·현장교원·경제산업·문화예술·미래정보)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교과 교육 전문가라고 인

정할 수 있는 교수나 교사가 배제되어 있어 조직상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표 3>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연차별 적용 일정이다(2009 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2009, p. 15).

<표 3>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연차별 적용 일정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학년 수학, 영어	2학년 수, 영 1학년 전체	3학년 수, 영 2학년 전체	3학년 전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	2학년 수학, 영어	3학년 수, 영 1학년 전체	2학년 전체	3학년 전체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맞물려감으로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물론,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이로 인하여 충분히 파생될 수 있는 교과서 작업의 문제들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연수 등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일단 고시부터하고 연구에 돌입하자는 정부의 의지는 날림 공사와 같은 많은 허술한 문제점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Ⅲ. 제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논의

1. 교육과정 개정 시기의 적절성 문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09년 5월 31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자문

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문회의는 지난 1월부터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 설정’을 위해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 연구를 하는 중이며, 국민공통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로 조정함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난 2월부터 개최된 토론회(서울, 부산, 광주 등)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교과군 축소의 범위, 일부 교과에 대한 집중이수제 적용, 초등 수업 확대 방안,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 등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연구진은 언급하였다. 그러나 자문회의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선 연구는 현재 기초 단계임을 확인하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그리고 2009년 6월 22~23일에 걸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많고, 비효율적이며, 확실적인 현행 교육과정의 개편에 대해 학부모·교원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 초·중·고 학부모 500명, 전국의 교원 500명(교장·교감 127명, 교사 363명) 등 총 1000명에 대하여 전화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론 조사의 결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구상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앞으로 미래 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토대로 삼을 교육과정 연구를 위해 단 2일 동안 전화 인터뷰로 의견 수렴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행위 자체가 결과에 관계없이 용인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다. 교직에 종사하는 500명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의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언어를 사용한 피상적인 전화 질문에 그 내용과 진상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답할 수 있는 교사나 학부형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 내에서의 기계적인 통합과 학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양과 질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의 양과 질적 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었다. 교과부에서도 그 동안 교과마다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교과 전체적인 내용 수준뿐만 아니라, 이것을 단위 시간마다 학습 목표를 달리하여 달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구조도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학생들이 많은 과밀 학급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학생들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무리였다. 이러한 사실은 단적으로 한 교과 내용의 양과 질이 단 기간의 연구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구나 이러한 대 규모의 교육 정책 연구는 교과 전문가들의 힘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정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성급한 결정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교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말았다.

교과 교실제와 관련하여, 교과부는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최근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교과 교실의 수업을 통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급 구조 해체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교과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에서 제시한 ‘학점 이수제’는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교과부는 고등학교를 무학년제로 하고 수업을 학점제로 하여 조기 졸업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게다가 대학에서도 학점이 인정되는 UP코스를 신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 외의 수업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갈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가 법률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약 7, 8년 터울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개정에 있어서 신중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한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시기가 과연 시의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교육은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과도한 사교육비 등의 병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과도지 못하는 경직된 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 없면하는결코 학습 부담 경감이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07 개정 교육과정도 학습자다양한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사교육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위주

의 이전의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한 사하여 개정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왜냐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이 2007년 개정이라는 용 등의 병하하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총론부터 다르권민의술한 총체적인 개편이었다는 것이다. 각론은 총론을 기초로 만들어지한 때고 있총론이 달라지면 각론도 달라져야 한다. 각론이 총론에 근거하지 않을 때 절름발이식 교육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으며 제도적·행정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 없이 급하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 제도적·행정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올해도 각 교육청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시행 대비 중학교 교사 연수를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1년 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교육과정을 한편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 가며 교사들을 괴롭히고 있다. 교육청 담당자나 현장 교사들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시행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없애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더욱 많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적 시행 단계에 있다. 전체적인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박한 이유도 없는데, 그나마 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개편을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다분히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편은 더더욱 성공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교육과정이 개편되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신뢰할 수 없는 교육과정 앞에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한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정할 만한 인사들로 공정하게 구성되었는지도 의문스럽

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목적과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정권의 변화와 관련 없이 중립적인 교육과정 개발,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서 예산과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총론과 각론별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의 기능을 흡수하고, 교육과정의 개발, 편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은 의사 결정의 결과이다. 따라서 의사 결정에서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단위 학교 및 학급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절차들이 간과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작업은 교수, 교사, 일반인 등 현장 교육자 및 시민이 관여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전적으로 교육 전문가들과 교사들을 배제한 국가교육과정기술자문회의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학교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가 줄곧 교육과정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각 교과목의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에 의하여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그에 따라 변화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배제한 구상안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불분명하게 제시된 인간상 ‘글로벌 창의 인재’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글로벌 창의 인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보통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인간상에 대한 고민이 철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러한 철학이 우리 교육 그리고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이자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과의 연관

성도 느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통 이런 인간상은 총론에서 풍부한 철학적 바탕과 사회적 분석이 어우러져 교과 각론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교육의 실제와 맞물려 들어가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왔다. 물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의 불일치가 계속 문제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가교육과정 포럼을 보면 이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총론과 각론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의욕이 앞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교 재량 수업 시수 20%를 먼저 내세우고, 총론이 연구도 되기 전에 약 430개의 학교에 이를 미리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무슨 기업체 사업 발표하는 것처럼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글로벌 창의 인재’란 수학, 과학,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국 민주 시민 교육을 포기하고, 엘리트 교육, 귀족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학생이란 말은 많이 나오지만 정작 학생들이 계속 주장하는 학생 인권 확보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 봐도 없다. 이와 같은 철학적 빈곤함과 편중은 현재 우리 정권 통치 방식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문구로나마 남아있었던 ‘교육을 통한 기회 상승’, ‘계층 이동과 사회 통합’의 기능을 무시하고, 완전히 무한 경쟁, 승자독식, 교육을 통한 신분 고착 현상 등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선택과 수월성을 내세워 자립형 사립고, 각종 자율 학교 등을 만들고 교장의 자율권으로 교사자격증 없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교직 진출의 경로를 마련해 주는 것은 그 동안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다루는 교육 철학이나 교육 전문성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외부 전문가의 교직 진출 확대의 이유를 다음 <표 4>와 같이 밝히고 있다.

<표 4> 외부 전문가의 교직 진출 확대의 이유

현행	개선 방향
▪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등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교원으로 임용. ▪ 외부 전문가 등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수학이 필요함. ▪ 현재는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외부 전문가를 정규 교원이 아닌 강사로써 임용이 가능하나, 신분·보수 등에서 정규 교원과 현격한 차이로 우수 인재 유인 곤란.	▪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교사 자격증 취득 경로 마련. ▪ 심화 학습이 필요한 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에 한정하여 연수 성적과 자질 등을 고려해 임용. ▪ 산학 겸임 교사 또는 강사로 채용(학교장)→방학 중 단기 연수 실시(교육감)→교사 자격 부여(교육감)→계약제 교원(학교장) 또는 정규 교원(교육감)채용 ▷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3. 입시 교육의 강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신 스스로가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교육과정특별위원회, 2009c). 그리고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로 줄여 고등학교에서는 모두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만들려고 한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2~3년의 학년군으로 묶어 국민공통기본 10개 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역시 교과부는 국가 수준의 교과 시수 편제 대신에 단위 학교에서 교과군 범위내의 과목 시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3, 6, 9학년의 학업 성취도 평가로 질을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안을 만든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는 우리의 교육이 획일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10년 기간과 많은 교과목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과 교원 인사 권한을 주면 학생 즉,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선진 교육이 실현되고 공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져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입시 경쟁 교육’과 서열화된 학벌 사회 구조 때문에 교육이 획일적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상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크게 선전했던 고 2, 3학년 선택 교육과정이 국·영·수 입시 교육으로 되어버린 것도 입시에 기인한다. 다음 <표 5>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이다.

<표 5>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주요 언론 보도

미래형 교육과정과 관련한 주요 언론 보도	
2009. 7. 24.	결국 고교 교육만 바꾼다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
2009. 7. 24.	미래형 교육과정 벼락치기 식 개편, 일제 고사가 빼앗아 간 방학 (한겨레 신문)
2009. 7. 24.	교육과정 개편 시안, 국영수 위주 입시 교육 되레 심화 우려 (세계일보)
2009. 7. 25.	학교가 국영수 학원으로 전락 (문화일보)
2009. 7. 25.	과목 수 준 만큼 국영수 수업 늘어날라 (한국일보)
2009. 7. 28.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서두를 일 아니다 (경향신문)
2009. 7. 29.	거꾸로 가는 미래형 교육과정 (한국일보)
2009. 8. 19.	MB 교육정책의 불편한 진실 (조선일보)
2009. 9. 14.	2년 만에 또? 교육과정 개정이 토목공사인가? (오마이뉴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이 개정 교육과정은 전인 교육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의 철저한 경쟁 체제 하에 몇몇 주지 과목을 중심으로 입시 강화 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 인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조화로운 감성의 계발을 위하여 예술 교육이 더 없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블랙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철저히 대학 입시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학 입시에 내신 성적의 비중을 높이면서 학교 교육에서 서열화된 평가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성적을 매기지 않는 과목은 교과와 특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교과

의 존립을 가능케 하려면 다른 교과와 차별화되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차별화된 평가로부터 학생들은 음악을 부담 없이 즐기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학생들은 열심히 가르치려는 음악 교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더구나 교과부는 창의적 특별 활동에서 실제로 지역 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인성 교육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별 활동으로는 오케스트라 활동, 작문, 클럽 활동, 신문 제작 활동 등의 예술 및 창작 활동을 비롯하여, 야구, 농구, 축구 등의 체육 활동, 지역 사회 또는 세계적 단체에서의 활동, 그리고 학생회 활동 및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등을 주당 3~4시간 이상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이상과 현실이 일치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특별 활동 조차도 대학 입시 구도 속에서는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수능 제도의 개편은 특별 활동의 바람직한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다음 <표 5>와 같이 ‘수능 I’과 ‘수능 II’로 구분하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표 6> 수학 능력 시험의 형태

수학 능력 시험의 형태
▪ 수능 I: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형태로 실시, 2학년 말 또는 3학년 초에 실시. 평가는 P/F 또는 등급으로 표시. ▪ 수능 II: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목 대상으로 학력평가시험 형태로 실시, 3학년 말(현재의 수능일)에 실시, 서술 식 평가 문항 포함 방안 검토, 평가 결과는 표준 점수로 표시.

2학년 말 또는 3학년 초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엄청난 입시 경쟁 속에서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입시 사교육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수능 제도안을 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란 결국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획일화된 교육 속에 민주 시민 교육을 포기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목을 군으로 묶어 과목의 수를 줄이거나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결코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없다. 이것은 매우 형식적인 근거이다.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를 주도하면서 학습자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과목이 과연 어떤 과목인지를 솔직히 밝히지 않는 한, 그리고 어떠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왜 사교육비가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대안도 이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수능 제도와 예술 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은 국·영·수 과목에 취약하고 예술 분야에 뛰어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교사 한 명당 많게는 500~600명까지도 지도를 해야 하는 음악교과의 특성상 학생 개인에 대한 서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형식에 치우친 서술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요한다면, 이들의 학습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끌 것이다. 이것이 과연 문서상에 진술된 ‘글로벌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인지를 묻고 싶다.

그동안 획일화된 교과 편성과 수업 운영으로 인문계·자연계가 아닌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소수라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서 외면당하여 왔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가 정책에 위배된다. 교과부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 혹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 심화 과목인 ‘음악 III’을 편성해서 이를 수능에 반영하고 대학 입시에 연결시켜, 이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피상적인 ‘핵심 역량’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주로 총론 연구 후 이를 교과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던 방식을 벗어나, 우선적으로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이것을 학년군과 교과군별로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길러야 할 핵심 역량으로 자존적 자기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상상력/창의력, 논리력, 문제해결력, 공동체 시민의식, 문화적 감수성, 지도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 정부 말기 미래 교육 비전(안)에서 이미 나온 바 있는 핵심 역량은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각 교과군과 학년군제에서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경로나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아 미사여구적인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나마 피사가 강조하고 있는 자기성찰 능력은 포함되지 않아 국제 기준 미달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5.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문제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에 있다. 교과부는 6월 11일 ‘학교 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발표 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이 단위 학교에서 학교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교과부는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큰 변화를 통해 모든 학교들이 국민공통교과 별로 연간 수업 시수의 20%범위 내에서 수업 시간 증감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적용받던 형태에서 벗어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 과목 신설이 가능해지고,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구분을 없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 과목 대신 심화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시키려 한다. 교과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이 가능해지고, 학교 간 ‘잘 가르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마치 학교를 진학 교육 기관, 즉 입시 교육 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학교마다 교육과정 선택권을 20%를, 자율학교는 35%를 주면서 학생 진로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교과 교실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고교 졸업고사제를 도입하고 대학입학사정관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는 이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도 맞닿아 있다. 결국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육 내적인 논리보다도 이번 정권의 이데올로기 구현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길들여져 있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당장 자율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연구 책임자인 H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수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위한 절차를 상상해 보면 이렇다. 먼저 좋은 교육 실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의 모음집으로서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관한 총론을 개정·고시하고,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자율학교 후보 신청을 받아,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하고(1년차), 예비기간 동안 현장 방문 평가(학교종합평가의 일환)를 통해 우수 학교로 평가 인정을 거쳐 자율을 부여하면(2년차), 해당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특성화된 질 높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자체 평가(3-5년차)를 실시한다. 이렇게 5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준비된 새로운 후보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우수 학교로 평가·인정해 자율을 확대해 나간다면 몇 년 후 우리나라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실천 학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다. 소위 학교, 교육 제공자, 교육 프로그램 간의 선의의 경쟁이 나타날 것이다.”(홍후조, 한국교육개발원정책포럼 188호)

그렇다면 연구진은 어떤 학교를 우수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역시 이에 대하여 연구 책임자인 H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례로 민사고, 이우학교, 영훈초교 등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 그 이상이다. 간섭을 안 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간섭한 결과들은 고만고만한 교육의 획일화였다. 우수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는 먼저 사립형 사립고, 자율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 그리고 특성화 중학교, 사립 초등학교, 국·사립 부설학교 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홍후조, 교육정책포럼 09. 29.)

바로 이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교 자율화의 표상이다. 이런 학교들이 단지 국가의 간섭이 없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학생 부모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보면 연구진의 고민은 오로지 고등학교를 공교육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인간상부터 방향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느끼도록 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위권 대학에 잘 보내기 위해 입시 교육에 치중하던 학교들을 양성화시켜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닌가 싶다. 심지어 학교 자율화 방안을 보면 수업 시수 35% 증감까지 들어가 가뜩이나 0교시 부활과 강제 보충 학습으로 학생들을 제도권 아래서 억압할 가능성도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입시 교육 자율화, 고등학교 입시 학원화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국어·영어·수학에 편중된 ‘편식 교육과정’ 혹은 ‘입시 교육 자율화 교육과정’으로 변질될 소지가 충분이 있다. 왜냐하면, 학교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와 상관없는 교과에 대해서는 증감의 자율화에 따라 20%를 축소시키거나(교육과정 자율화), 혹은 학기 초에 몰아치기 하고(집중이수제), 그리고 남은 기간에는 입시 위주 교육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영·수 기초 영역을 20%

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국·영·수 중심은 초·중·고 교과군의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도덕과 사회, 과학과 실과, 음악과 미술은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인다. 하지만 국어, 수학, 영어는 그대로다. 이러한 사실은 음악과 미술은 모둠으로 가르치지만, 영어는 영어만 가르치라는 뜻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는 아예 국·영·수를 ‘기초 교과’로 명시하고, ‘기초 교과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편이 과연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인지 의문이 간다.

입시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우 교육과정의 자율화 정책은 어쩌면 과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자본의 자유로 이어졌듯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줄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연령 단계에 맞는 교육 내용 원칙과 교과 내용 계열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교과군의 구성도 마찬가지이다. 각 교과들은 학교 교육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과군에 대한 연구는 학생 발달 시기, 교과 간의 상호 관계성 그리고 여러 제반 환경을 심사숙고하게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교과 전문가들의 항의에 쉽게 교과군을 넘나드는 각 교과들의 방향은 교육과정 연구진들의 교과에 대한 철학적 소신의 부재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제시되지 않으면 가뜰이나 입시를 중시하는 학교 교육은 더욱 더 입시 교육에 편중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전인 교육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과정은 학문적 연구를 필요로 하여야 하며 사회적 합의 과정이어야 한다. 교과군, 학년군별로 핵심 역량이 수평적이고 통합적으로 학습되려면 학교 안에서 교과 교사들 간에 공동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전통이 학습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6. 집중이수제의 문제점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음악과 미술을 하나의 예술 교과군으로 묶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 학기에는 음악만, 그리고 다

른 학기에는 미술만을 가르치는 집중이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당 1시간 되는 교과를 한 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집중이수제 도입에 대하여 “학생이 동시(학기, 주)에 이수하는 과목 수를 축소하여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을 줄이면서 수업 이해도를 높이고, 교사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발표하였다(교육과정특별위원회, 2009a, p. 3). 더구나 교육과정특별위원회 연구팀은 「교육과정 요약」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단순히 연극, 영화, 무대예술, 문화콘텐츠 등도 예술 교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교육과정특별위원회, 2009a, p. 2).

이와 같이 교과부는 교과별로 학년·학기 단위 집중이수제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합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업 시간을 조정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교과 집중이수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과부가 초등학교에서 음악과 미술을 한 학기를 통해 집중해서 가르치라하니 과연 어린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과 흥미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궁금하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음악과 미술을 하나의 예술 교과군으로 묶고 그 중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여 한 학기 동안에 집중해서 가르치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근거 위에서 나온 방안인지도 의심스럽다. 교과에 대한 특별한 전문적 지식도 없이 그리고 많은 논란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소수 연구진들이 단호하게 교과 내용 자체에 대하여 손질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과연 음악이나 미술이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가? 꼭 배워야 할 내용을 적정한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게 한다면 어떤 내용이든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입시에 초점을 맞춘 경쟁구도 속에서 주지 교과 외의 그 어떤 교과도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과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부담과 실효성, 그리고 전인 교육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교과 개편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음악은 지식 교과와는 다른 감성 교과이다. 감성 교육이란 집중이수제를 통하여 갑자기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음악 교육은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듯이 인지 발달 과정에 따른 지속적인 체험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음악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집중이수제는 음악 교과의 본질을 구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음악에 대한 집중이수제는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이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입시 경쟁과 학교 평가의 제도 속에서 국·영·수 중심으로 흐르는 현 공교육의 상황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교과부의 학교 예술 교육 정책에 대한 부재는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음악 교과에 대한 집중이수제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음악을 집중이수 한다면, 그 후 1년이 지난 4학년 2학기에서도 다시 음악을 접한다는 것이다. 즉, 음악 수업의 경우 1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음악 교과에 대한 집중이수제는 인지 발달에 따른 감성 계발 교육과 다양한 지능을 이용한 지속적인 학습 경험을 어렵게 만든다(민경훈, 2009, p. 314). 이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다중 지능 이론, 감성 교육의 특성, 다문화 교육과 같은 세계 음악 교육의 동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학교 음악 교육을 뒷걸음치게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오로지 교육과정을 전공한 몇몇 소수 교육학자들에 의하여 급히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서, 전문 음악교육학자들이 주장하는 “음악을 통한 예술적 감성은 인지 발달 과정에 따른 꾸준한 경험과 연습을 통하여 계발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음악교육이 감성 교육인 동시에 지속적인 학습을 요구하는 기능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고등학교의 과정까지 매주 계열성 있게 순차적으로 음악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음악 교과에 대한 집중이수제 도입은 폐지되어야 한다.

IV. 음악교육 관점에서의 문제점 논의

독일의 경우, 20세기 초에 독일의 국민 음악 교육자 외테(F. Jöde)는 국가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모든 국민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청소년 음악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외테의 청소년 음악 운동은 세 가지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그는 산업 사회에서 인간이 기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고립 현상을 청소년 음악 운동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고, 둘째, 이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사회적 특수층에 의하여 지배되어온 음악 문화 대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새로운 문화 개혁 운동으로 발전시켰으며, 셋째, 이 청소년 음악 운동은 민족적 차원에서 전쟁으로 절망에 빠진 자국민들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음악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개된 운동이었다(민경훈, 2000, p. 309). 이 청소년 음악 운동의 결과 오늘날 독일에는 ‘뮤직슐레’라는 시립 음악 학원들이 곳곳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정부와 시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의 많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뮤직슐레는 사회 음악 교육을 자연스럽게 전개하면서 국민의 음악교육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 뮤직슐레가 학교와 상호 간에 협조를 하면서 음악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악기를 대여하는 제도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또는 레슨비를 할인해 주는 혜택 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면 누구나 음악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물론 시립 음악 학원들의 존립에는 음악 학원 협회·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협력과 음악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 따른다. 최근에는 뮤직슐레의 교사들이 특기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으로서 학교들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이 음악의 생활화 차원에서 사회 교육 기관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일반 학교는 학교의 입장에서부터 음악을 모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원초적인 문화 활동의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의 문화적 권리의 차원에서, 또한 감성교육적·공동체적·교

육적·창의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은 입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전혀 사회에서 음악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초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했던 어린이들마저 중학교에 들어오면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물질 만능주의적인 현대 사회에서 학교 교육은 불신과 경쟁을 날로 심화시켜 가면서 더욱 더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신이 사막화되어가는 현상을 막아 줄 수 있는 오아시스적인 탈출구가 바로 정서적 문화 예술 활동이다. 정부는 어린이로부터 고연령층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희망한다면 전 생애에 걸쳐 음악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음악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설·조직·교사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호화스럽고 과시적인 음악 문화가 아닌 전인적 차원에서 인류애에 바탕을 둔 음악 문화의 환경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의 사회가 독일과 같은 시스템의 음악교육 제도를 마련하여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에는 형편상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 입시 경쟁의 구도 안에서는 특히나 어렵다.

정부는 입시 경쟁의 구조적 양상에서 음악 교과를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인간 교육과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하여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음악 교과는 인생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전인적 성격의 교과이다. 절대로 경시될 수 없는 주요 교과이다. 그리스 시대에는 음악이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다스리는 예술 과목으로서 다른 과목에 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오늘날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전 국민들의 문화적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지 과목 중심의 입시 경쟁 구조 속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는 철저히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류적 그리고 전인적 차원에서의 사회 음악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학교 음악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교과부는 음악 교과의 평가 방식 전환이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현상으로 이

정책은 음악 교과 자체에 대한 경시 풍조를 가져와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함은 물론, 국·영·수 등 주지 교과에 대한 학습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더구나 비주지 과목들을 제외시킨 채 교과부의 의도대로 내신을 입시에서 더욱 더 강화시킨다면 학교는 내신 학원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특히 음악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독일의 음악교육학자 놀테(E. Nolte)는 다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다른 교과에 비해 음악 교과가 가장 효과가 높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사회의 음악 교육까지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교에서 만큼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음악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풍토는 만들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되는 음악 교육의 집중이수제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1년 동안이나 못하게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음악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지속적인 체험을 통하여 서서히 드러날 수 있는 경험 교과이다. 음악 교과에 대한 집중이수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교과부는 하나의 독립된 예술 교과를 만들고, 그 안에 다른 예술 영역들, 즉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문화콘텐츠 등과 함께 동등하게 음악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즉, 초등학교부터 예술 교과(음악, 미술, 영화, 연극, 무용, 문화콘텐츠 등)를 만들어 기존의 독립적인 음악 교과를 예술 교과의 작은 한 과목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의지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TF팀에게 요구하여 초등학교에서의 예술 교과 수용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은 받아내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다른 예술 영역들이 들어올 경우 충분히 과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서의 음악교과의 당위성 등이 강하게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무엇이 본질적으로 문제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는 주지 교과 중심의 입시 경쟁 구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여타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 놓고, 외형적인 면만을 손질하는 교육과정은 또 다른 문제를 생산할 뿐이다.

V. 학교의 독립 교과로서 음악 교과의 당위성

학교 교육에서 음악이 독립 교과이어야 하는 이유는 <표 6>과 같다.

<표 7> 학교 교육에서 음악이 독립 교과이어야 하는 이유

독립 교과로서 음악 교과의 당위성
① 예술의 원초적인 핵심은 음악이다.
② 음악 교과에서는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할 수 있다.
③ 음악은 예술의 기본 장르이다.
④ 음악은 예술 교육 이전에 인간 교육이다.
⑤ 음악 교과는 음악적 지식 체계와 음악적 사고 방법을 요구하는 독립 교과의 영역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⑥ 전인적 인간 육성 및 인간 지능의 균형을 위해서 음악이 필요하다.
⑦ 학교 음악 교육은 문화유산 전승 과정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① 예술의 원초적인 핵심은 음악이다:

인간은 예술의 가장 원초인 음악을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배워 왔다. 음악은 다양한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근원적 소양이 된다. 즉, 음악은 영화, 뮤지컬,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영역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음악은 예술 활동의 가장 기초이자 가장 핵심 내용인 것이다. 핵심 내용을 교과로 설정하고 배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② 음악 교과에서는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할 수 있다:

음악 교과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이 안에

서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오페라 등의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만약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영화나 연극 등을 과목으로 채택한다면, 여타 다른 모든 예술 장르들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술 교과안에서 과목 남용의 혼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

③ 음악은 예술의 기본 장르이다: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은 하나의 전문적인 예술 장르로서 별개의 특별 활동 시간을 통해 지도되어야 한다. 음악 교과는 예술의 기초이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은 예술의 전문적인 장르이다. 만약에 음악 교과를 없애고 예술 교과를 만든다면, 이 예술 교과에 수많은 예술 장르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를 가르쳐야 하고, 특별 활동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교과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 교과는 음악으로 하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은 특별 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지도될 수 있다. 음악을 독립 교과가 아닌 예술 교과 중 한 과목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④ 음악은 예술 교육 이전에 인간 교육이다:

음악은 영혼을 다스리는 교육이자 감성 교육이며, 그리고 인성 교육이다. 광음처럼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 정신의 사막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감정의 무절제, 폭력 학생들, 컴퓨터 게임의 몰두로 인한 인간 고립화 현상 등, 이 모두가 인간 정신의 사막화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규범은 물론, 학교 질서를 파괴하는 그냥 넘기기에는 매우 심각하다(민경훈, 2001, p. 21). 2007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 10명 중 1명은 우울증 혹은 주의력 결핍 장애아로 정밀 검사 소견 대상이다. 고소득층의 부모들은 무조건적 명문 대학 입학 목적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모들은 돈벌이 때문에, 학교 교사들은

잡무 처리 때문에, 소신과 철학 부재의 교육과정 학자 때문에, 또한 정부 정책 관계자들은 달성해야 할 성과 때문에 자녀의 품성 교육, 인성 교육, 감수성 교육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음악 교육을 통해서 정신의 사막화 현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¹⁾ 청송교도소에서의 수감자들이 학교에서 음악을 제대로 경험하였더라면 이와 같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간증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음악은 단순히 예술 과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음악은 예술 교과인 동시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류애에 바탕을 둔 매우 중요한 감성 교과라는 것이다. 독일의 국민 음악교육자 외테는 음악이 인간의 삶을 위하여 단지 교량적 역할이나 여과기적 역할이 아닌, 천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음악을 인간에게 접하게 함으로써 세속적인 산업 사회에서 음악의 치유적인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학교 음악교육은 물론 생활 음악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음악은 정치가 아니다. 지금까지 음악교육이 잘못되었다면 음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교육을 잘못시킨 결과이다. 이러한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 교사들은 반성하고 많은 연수를 통하여 자신의 음악교육자적 자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에서 음악은 인간 교육으로서의 독립된 과목으로 필수가 되어야 한다.

⑤ 음악 교과는 음악적 지식 체계와 음악적 사고 방법을 요구하는 독립 교과의 영역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음악은 가슴으로 직접 느끼는 체험의 과정이다. 음악적 재능은 어릴 때 결정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시기를 놓치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고 가장 빨리 소멸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초등학교시기에 지속적으로 음악을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1) 안드레아스 도트(Andreas Dodt)는 1986년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들에 있어서 음악의 기여’(Musik-Beitrag zur Lösung heutiger Jugendprobleme)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현대 사회에 학교 음악 교육의 과제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 음악 교과에 집중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드너의 다중 지능 이론에 따르면, 음악적 능력은 언어와 수리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이며 반드시 계발되어야 하는 지능이다. 다시 말해서, 음악적 능력은 언어와 수리, 혹은 다른 예술 영역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음악 교과는 음악적 지식 체계와 음악적 사고 방법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독립적인 교과 영역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음악적 지식과 음악적 사고는 음악 교과 교육을 통해 계발되는 인간 고유의 독립적인 정신 활동이며, 이러한 능력의 계발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된다. 학생들은 독립적인 음악 교과를 통해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는 그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계발시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⑥ 전인적 인간 육성 및 인간 지능의 균형을 위해서 음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또한 예로부터 음악이 빠진 시기는 없었으며,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풍류를 즐길 줄 알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교육에서 ‘자아 완성’ 또는 ‘전인적 성장’의 개념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다. 전인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공평하게 제공해 줌으로서, 그들이 지닌 잠재적인 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의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데 의의가 있다.

인간의 지능이 균형 있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악적 지능도 학교 교육을 통하여 발달되어야 한다. 또한 가드너는 8가지 지능 영역 중 ‘음악적 지능’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적 성장이 꼭 필요하며 학교 교육에서 음악은 기본적인 교과이어야 한다. 음악적 성장은 다른 교과를 통하여 발달될 수는 없다. 음악은 소리를 통한 예술이다. 소리를 통한 예술적 교과는 음악이외에는 없다. 바로 이것이 학교에서 음악 교과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⑦ 학교 음악 교육은 문화유산 전승 과정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은 중요한 문화유산 전승 과정으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어느 민족이 문화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맥락을 바르게 이해하여 그 문화적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훌륭한 음악 유산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바로 음악교육인 것이다. 음악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참된 음악적 역사이다. 이점에서 음악교육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계승된 좋은 음악 문화를 경험하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본다.

VI. 나가면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미래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었다. 올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1차 년도이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 과정을 급히 다시 바꾸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그 이유를 “교육의 고질적 병폐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비롯되고 21세기를 대비하여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방향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축소,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전면화,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제도화, 교과목의 통폐합, 집중이수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초등 수업 시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는 교육과정이 아니다. 고질적 병폐는 학벌 사회와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교육과정의 기본적 운영조차 교란되어 왔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또 다시 태동하는 개정 교육과정 역시 입시 준비 기관으로 전략한 학교의 교육을 결코 개선시킬 수는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창의 인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일제 고사의 기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 따른 철저한 경쟁 구도라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일제 고사가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고, 승진의 도구로 우선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으로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입시 강화 교육이 지양되지 않는 한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을 더욱 살인적인 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글로벌 창의 인재’라는 교육 목표가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홍익 인간과 전인 교육이야 말로 헌법 정신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 아닌가?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보통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의무이다. ‘글로벌 창의 인재’라는 교육 목표가 소수 엘리트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우리 학교 교육의 병폐를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 개정의 진정한 의도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미 밝혔듯이 ‘현재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학교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함’에 있다. 이번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고교 다양화 정책을 필두로 학교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정책을 빠르게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교과부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시장주의적 경쟁 교육을 부추겨서는 안 되며, 또한 교육 문제를 내재적 접근이 아닌 철저히 정치적 맥락에서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주의적, 입시경쟁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이 심하게 관계하는 한 창의적 교육, 학습 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그 어떤 명분도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 효과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단지 문서상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로서 그에 따르는 교과서, 학사 일정, 교원수급과 양성 체계, 입시제도 등의 변화를 동반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의 정신을 충분히 이

해시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그 어떤 긍정적 효과보다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안정적 운용, 그 결과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 개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안 마련, 현장 적합성 검토,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장기적 플랜이 필요한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과정의 적용과 평가를 건너뛰고, 비밀리에 급히 밀어붙이는 쿠데타적 발상은 교육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보다 강행과 저지라는 정치적 격돌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점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된 첫 해에 또 다시 정부가 교육과정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 과연 순수한 교육적 의도로부터 나온 것적, 아니면 정치적 의도로부터 나온 것인 비전한 번 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는 1차 시안의 총론 부분에서 학습의 효율성 제고, 폭넓은 인성 교육 추구, 학생의 핵심 역량 강화, 학교의 다양화 유도 등 각종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입시 위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2차와 3차 시안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학업 성취 평가와 ‘환경과 성장’ 교과목에 대한 언급이 예상된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정부가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과군을 축소한다면 굳이 ‘환경과 성장’이라는 과목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교육과정특별위원회는 2009년 4월 24일(금) 광주에서 개최된 제3차 대토론회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대 효과’로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획일적 교육과정은 사라지며, 학교마다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실천될 것이다. 또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과 조화로운 입시 선발 제도가 운영되어 충실한 수업이 전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전문성이

신장되고, 학교마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적용 노력이 확산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도 증진됨은 물론, 논리력, 창의력, 상상력 등 글로벌 창의 인재 핵심 역량이 축진될 것이며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증진, 사교육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교육과정특별위원회, 2009, p. 28)

미래형 교육과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이 개정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고질적인 병폐를 몰아낼 수 있으며, 교육의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는 현 입시 강화 교육의 구도 속에서 너무 조급한 시기상조이다. 그 어떤 교육과정도 입시 경쟁을 위한 구도 속에서는 논리력, 창의력, 상상력이 풍부한 글로벌 창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는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 공교육의 실패라고 할 만큼 위기에 도달하여 공교육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 상황 속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이 지금 꿈꾸는 이상들이 언제쯤에나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지 참으로 요원하기만 하다. 그동안에도 이미 밝혀졌듯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병폐를 낳고,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는가?

인구 500만의 핀란드는 학원도 없고 우리나라 수학 시간 보다 절반 밖에 되지 않지만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매년 1위를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급당 20명 안팎의 학생 수와 양질의 교사 육성, 배려와 평등의 철학, 국·영·수 시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실시하는 음악, 미술, 체육, 목공, 재봉, 윤리 교육, 직업 교육 등이 공교육 성공의 비결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려 한다. 이것은 세계의 변화에 역행하는 교육 정책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는 핀란드처럼 공교육 정상화만이 아이들을 구하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왜 모르는가?

하나의 교육과정이 탄생하기까지에는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충분한 여론의 수렴, 많은 교과 전문가들의 참여, 절차적 타당성, 그리고 충분한 연구의 기간 등이 필요하다. 정당성이 극히 결여된

교육과정을 급하게 확정·고시하여 실행할 때, 그 경우피해자들은 고스란히 학생들과 미래의 한국 사회가 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과 믿을만한 신뢰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2009 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총론 시안(1차)** (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2009. 9. 29). 서울: 2009 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 교육과정특별위원회 (2009a). **미래형 교육과정 요약** (보도자료, 2009. 5. 4). 서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교육과정특별위원회 (2009b). **보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6. 11).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정특별위원회 (2009c). **미래형 교육과정,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을 위한 제3차 대토론회, 2009. 4. 24). 서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제8차 국민 대토론회, 2009. 7. 24). 서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민경훈 (2000). 프리츠 외테의 청소년 음악운동에 관한 고찰. **음악과 민족**, 20, 305-340.
- 민경훈 (2001). 생활 음악 문화의 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20, 21-52.
- 민경훈 (2009). 음악교과의 관점에서 본 미래형 교육과정의 문제점 논의. **예술과 교육**, 15, 309-321.
-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09). **미래형 통합교육과정 개정 방향** (2009년 제5회 정기학술대회). 서울: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ABSTRACT

Problem of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9 and the Crisis of Musical Education

Min, Kyung-Hoon

This year is the first year that applies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7’ to school. But suddenly the government is going to rapidly revise the curriculum again. The government made her position that the current curriculum cannot but be revised because the chronic educational ills are caused by it. And the key contents of the revision are permission for self-regulating increase and decrease of subjects at twenty percent, increase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batch application of an intensive completion system, and expansion of elementary class hours. If the curriculum which lacks legitimacy is decided and announced rapidly, its victims will be the very students, parents of the students, and Korean society in future. Until a curriculum is created, public feedback through various surveys of public opinion, participation of many subject experts, procedural propriety, and sufficient research period are necessary.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9, guarantee of procedural propriety and credible reliability is required.

Key Words : music education, music subject, futuristic curriculum,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9

투고일: 9월 30일, 수정: 11월 25일, 게재확정일: 12월 12일